



아시아 및 EU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연구책임자 / 백도명

연구기간 / 2008.06-2008.09

등록번호 / 보건분야-연구자료 연구원 2008 - 82 - 1034

본 연구는 아시아 지역 국가 및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석면피해 현황 및 관리 정책과 석면피해 근로자 또는 재해자들의 구제 정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국내에서의 석면함유 물질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현장 등에서 석면으로 인한 질환자들의 발굴, 관리 및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2008년 7월 3일부터 5일까지 아시아와 유럽 등의 석면피해관리와 구제정책을 파악하고자 열린 '아시아에서의 석면 제거와 석면 산업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된 25편의 발표문과 토론문들, 국내에서 개최된 석면관련 토론회에서의 발표문을 참고로 했으며, 일본, 프랑스 등 외국 관련기관 담당자와의 직접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40여개 국가들에서 석면사

용 금지 법안이 발효되어 더 이상의 석면 노출이 중단되었으나, 아시아 국가 대부분에서는 석면 사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었다.

또한 일본, 싱가포르, 한국과 스리랑카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아시아 국가들에서 석면관련 질환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는 중피종, 폐암, 석면 진폐 등 석면질환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검진능력의 부족이 일차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석면 사용량 증가가 최근 10-50년에 집중되어 아직 본격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잠복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풀이되며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석면피해구제제도를 갖춘 나라는 없다.

일본의 경우, 2005년 환경성피해자 구제를 위한 석면신범이 제정되었으나 2006년까지 산재와 석면신범에 의해 구제된 건수가 37.6%에 그쳐 나름대로 홍보와 구제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유럽의 경우, 나라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석면피해구제 제도를 갖고 있으며 의학적인 측면에서 석면폐 등 석면질환에 대한 장애 정도와 구제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인자들이 국가별로 상이하어 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러한 석면질환 구제의 다양성은 질환자체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각 국가의 사회보장체계가 상이하고 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구제는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석면구제기금을 조성하여 별도의 행정기구를 통해 구제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에도 독립행정법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나라별로 제도가 상이한 측면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해당 질병이 석면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석면폐나 폐암, 녹막비후 등이 지정 질병에서 누락된 점, 구제를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명확히 원인자 책임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공적 부담도 아닌 어중

간한 부담방식으로 꾸려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석면피해구제법을 만들려면 구제의 대상, 범위와 구제를 위한 재원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고려될 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위한 국가 및 사업자들이 재정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은 형성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과거 석면의 사용량 및 석면관련질환의 발생시기가 일본보다 약 10~15년 뒤늦어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전체 규모의 모습이 점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지금이 작업장의 석면 노출 뿐 아니라 환경 중에서의 노출로 인한 질환 발생자들을 발굴하고 구제할 준비를 시작할 시기이다.

석면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나타나므로 노동, 환경, 교육, 건설, 국방 등 다양한 부처의 이해와 관점 차이를 떠나 합동으로 구제 제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공 | 산업안전보건연구원